

**원유 전국단위 수급조절제 도입 급선무**

원유의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전국단위 수급조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2월 내놓은 낙농산업 선진화대책의 핵심은 효율적인 원유 수급관리 방안이다. 여기에 생산성 향상 대책, 유통개선을 통한 소비확대 방안 등을 더해 낙농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낙농선진국과의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국내 생산기반 위축과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런 정부의 의지와 달리 낙농 선진화대책은 발표되자마자 이해 당사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모든 대책의 시적점이라 할 수 있는 전국단위 수급관리대책부터 꼬여 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선진화대책은 또 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급불균형 왜 발생하나 = 국내 낙농업을 얘기할 때 단골 메뉴는 수급불균형 문제이다. 원유 생산량과 소비량의 균형을 좀처럼 맞추기가 힘들어 해마다 공급과잉과 부족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왜 그럴까. 국내 원유 수급구조를 들여다보면 그 원인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해 국내 유제품 소비량은 320만톤 정도다. 이 중 210만톤은 국내산 원료 제품이고, 나머지 110만톤은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한 유제품이다.

이처럼 유제품 원료 조달방식이 국내산(70%), 수입산(30%)으로 뚜렷하게 양분돼 있고, 국내 착유우마릿수가 큰 변동이 없는 구조라면 수급불균형이 반복되는 문제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원인은 다름 아닌 국내

원유 수급관리 주체와 수입유제품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데서 찾을 수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국내산 원유 수급관리는 29개 집유주체별로 제각기 수행중이고, 외국산 유제품 수급은 수급조절 역할과는 거리가 먼 한국유가공협회 또는 수입업체가 따로 수행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단위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잉여 쿼터’ 문제해결이 핵심 = 수급불균형을 해소 하려다 보니 정부가 내놓은 낙농산업 선진화대책은 전국단위 수급조절을 위한 방안과 그 역할을 수행할 기구 설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만톤을 국내 원유의 적정생산량으로 보고 법령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급균형을 이뤄나가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가칭 중앙낙농기구를 설립해 원유 수급조절 관리 권한을 주고 단계적으로 전국단위 수급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국내 수급목표량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다원화된 집유주체를 하나로 묶어 원유수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인데, 문제가 간단치 않다. 우선 농가들 입장에선 당장 잉여 쿼터 해결 방식이 최대 관심사이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200만톤이 최종 원유 수급목표로 확정될 경우 현재 225만톤까지 늘어나 있는 쿼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25만톤을 줄여야 하는데 쿼터 소각방식에서 정부와 농가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

정부는 농가와 유업체간에 자율감축을 원하고 있는 반면 농가들은 잉여 쿼터분을 정부가 매입해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배정식 부장은 “잉여 쿼터량 25만톤은 kg당 쿼터값을 10만원씩만 잡아도 684억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금액을 농가와 유업체가 알아서 소멸 처리하려면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별도의 정책자금을 마련해 쿼터를 유상소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학계 관

계자는 “낙농가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서는 선진화대책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유상소각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유주체가 누가 되느냐도 핵심 관건이다. 정부는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일원화를 우선 추진한 뒤 민간업체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업체는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일원화는 원유독점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앙낙농기구 설립과 관련해서도 생산자와 유업계 모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핵심사안마다 생산자와 유업계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영남대 조석진 교수는 “나라마다 환경은 다르지만 주요 선진국들이 낙농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한 것은 생산자와 유업체간의 거래교섭력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느냐였다”며 “약자의 위치에 있는 낙농가들에게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낙농제도 개선에 있어 누가 무엇을 얼마나 더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절대 이뤄질 수 없고 내가 얼마만큼을 내놓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제 곡물값 · 환율 '들쭉'...

### 사료업계, 값인상 저울질

올 들어 국제곡물가격과 환율이 계속 급등세를 보이자 사료업계가 사료 판매가격 인상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해도 이를 그대로 판매가에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축산물 생산비에서 사료비 비중은 축종에 따라 40~60%에 이른다.

◆국제곡물값 · 환율 강세 지속 = 미국과 남미 · 유럽의 기상악화로 인한 작황 부진, 바이오에너지용 곡물 수요 증가가 맞물려 대두와 옥수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두 국제가격(4월25일 기준)은 1톤당 617달러로 지난해 12월의 474달러보다 30.2%나 급등했다. 옥수수도 같은 기간 동안 259달러에서 270달러로 4% 올랐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이 같은 상승세가 세계 곡물 재고량

감소 등으로 인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도 큰 복병이다. 환율은 지난 1년 동안 1달러에 40여원 상승했다. 게다가 최근 유럽의 외환위기 등으로 환율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 이영일 농협사료 외자구매부장은 “통상 1달러당 환율이 10원 오르면 사료값이 0.5~0.6% 오른다”면서 “곡물 가격보다 환율 상승이 더욱 큰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료업계 동향은 = 가격 인상에 관해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사료업체의 한 관계자는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연동해 사료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농가의 민감한 반응과 업체간 과열경쟁 때문에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국내 사료업계 3위인 하림그룹의 한 관계자는 “기본 입장은 생산성 향상과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원가 상승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것”이라면서도 “인상 여부는 원가 인상 압박강도와 하반기 국내 상황 등을 종합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사료시장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농협사료는 가격 인상에 더욱 신중한 입장이다. 농가에 미치는 파장과 국내 민간사료에 대한 가격 견제 기능이 크기 때문. 이에 따라 올해 가격 인상은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인상폭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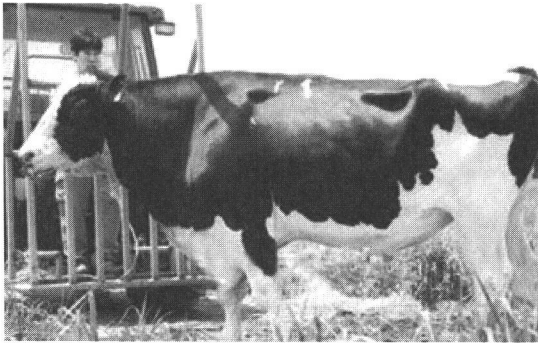
또 옥수수 · 대두 등을 선물거래(현재 시점에서 3개월 또는 6개월 후에 상품 인도와 대금 결제 실행을 계약하는 거래방식)를 통해 상당 부분 구매해 놓은 상태다. 농협사료 관계자는 “사료 가격 인상요인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원가 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사료값 안정과 농가 생산비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근본적 대책 나와야 =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사료 가격 안정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사료 가격 인상은 물가 상승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정부당국은 사료업체에 대한 원료 구매자금 지원 확대와 사료가격안정기금 조성 등 사료

가격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상위 1% 수소 '유진'**

낙농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5월 15일 경기 고양시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에서 한국형 보종 씨수소 '유진' (사진)을 처음 공개했다.



홀스타인 품종의 이 소는 지난달 전 세계 12만5,000여 마리의 씨수소를 대상으로 한 '국제유전능력 평가' 우유 생산부문에서 국내 씨수소로는 처음으로 상위 1%에 포함됐다. 국내에서는 씨수소 751마리가 평가에 참가해 '유진'을 포함해 7마리가 고능력군에 해당하는 상위 10%로 평가받았다. '유진'은 단백질 생산부문에서도 상위 5% 이내로 평가됐다.

축산과학원은 '유진'의 유전자를 받아 태어난 암소가 연간 1만2000~1만4,000kg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mL팩 우유를 매일 150~200개를 생산하는 능력이다. 국내 축산 농가 젖소 한 마리의 연평균 우유 생산량은 9,638kg이다.

2005년 3월에 태어난 '유진'은 현재 몸무게만 1,100kg으로 일반 수소(800~900kg)보다 20~30% 무겁고 체고는 183cm다.

**쿼터제 부활 조짐...누가 첫발때나**

지난 해 1월 정부는 FMD로 인해 원유 생산량이 급감하자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쿼터를 늘리고 연간총량제를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유업체들도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금년 말까지 쿼터 초과물량에 대해 정상유대를 지급키로 했었다.

이 같은 유업체들의 생산독려와 함께 지난해 8월 기본 원유가격 인상과 체세포 2등급 인센티브 상향 조정 등에 힘입어 원유 생산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최근 원유 생산 증가 속도는 연구기관이나 관련업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어 최근 원유 생산량을 보면 하반기 공급 과잉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쿼터제의 부활이 예고되고 있다.

이미 낙농가들도 쿼터제가 다시 시행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다. 때문에 최근 유업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쿼터 거래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5만원까지 하락했던 낙농진흥회의 쿼터 가격이 최근에는 20만원을 육박하고 있는 것은 이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누가 언제부터 쿼터제 시행에 들어갈 것이냐 일 것이다. 대부분의 유업체들이 금년 말까지는 잉여원유에 대해 정상가격을 지급키로 했기 때문에 결국 낙농진흥회가 먼저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쿼터량에 대한 형평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일부 유업체들이 쿼터제를 유예시키면서 소속 낙농가들의 쿼터를 재 산정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원유 부족사태를 겪으면서 일부 유업체들이 원유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량 전부를 쿼터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 같이 유업체들이 쿼터량을 임의로 조정하게 되면 쿼터제 시행 이후 쿼터 매매시 매매량의 20%를 귀속시켜가며 지속적으로 쿼터량을 감축하기 위해 그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그 동안 정부 정책에 동참해 온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들은 다시 한 번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때문에 낙농업계에서는 전국단위쿼터제 시행을 비롯해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일원화 등을 통한 항구적인 수급 정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